

광주·전남 초·중·고 ‘학업중단’ 2천명 넘는다

1,105·1,108명...작년비 21%↑ 대인관계 부적응 등 자퇴율 높아 시민모임 “위탁기관 확대 필요”

광주·전남지역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이 2,000명을 넘어섰다. 교육청은 중단 위기 및 학교 부적응 학생에게 상담을 제공하는 등 숙려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전담 상담인

력의 부족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에 따르면 지난 2월 28일 기준 광주·전남지역에서 학업을 중단한 학생이 광주 1,105명(남 557명·여 548명), 전남 1,108명(남 543명·여 565명) 등 총 2,213명으로 나타났다. 광주는 218명, 전남은 160명 늘어나는 등 지난해(1,835명)보다 20.6% 증가했다.

학제별로는 초등학교 548명, 중학교 291명, 고등학교 1,374명으로 집계됐다.

고등학생의 경우 학업을 중단한 전체 학생 중 34.1%(469명)는 학업 관련, 대인관계 등 부적응으로 인해 자퇴해, 기타 사유를 제외하고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질병(5.3%), 해외출국(3.5%) 순이었으며, 원인을 알 수 없는 기타 사유로 인한 학업 중단 사례는 53.6%(727명)에 달했다.

초·중학교의 경우 학생 중 63.4%(532명)는 해외출국, 질병 등으로 인한 면제 대상이었으며, 36.6%(307명)는 미인정유학, 질병 등의 사유로 유예하며 학업을 중단했다.

교육청은 학업중단 학생이 늘어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해 전담 상담원과 상담 및 체험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학업중단 숙려제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광주 관내 학업중단 숙려제 위탁기관 15곳 중 일부 기관은 전담(전문) 상담 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낮은 실적을 보이는 등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에 따르면 6개 시·구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5개 구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4개 거점별 청소년수련시설 등 총 15개 기관에서 학업

중단 숙려제를 운영하고 있다.

15개 기관에서 숙려제에 참여한 학생은 총 230명이었으며, 숙려제 이후 76%(174명)의 학생이 학업에 복귀했다. 이 중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경우 참여 학생 173명 중 80%(139명)가 숙려제 이후 학업에 복귀한 반면, 구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복귀율은 전체 학생(48명) 중 54%(26명)로 저조했다.

시민모임은 “위탁기관의 양적 확대를 통해 근거리 통학, 프로그램 공간 활용 등 장점을 살릴 필요도 있지만, 이와 동시에 상담 기능을 강화하지 않는다면 학업중단 숙려제는 허울뿐인 제도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며 “광주시교육청은 숙려제의 전담(전문) 상담 인력 배치를 통해 학업 중단 징후 학생의 체계적인 관리와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혜린 기자

학운동 어르신들 작품 한눈에 23일까지 ‘우리 동네 사진전’

광주시 동구 학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국윤미술관 제1전시관에서 어르신들이 핸드폰으로 촬영한 일상을 담은 사진 31점을 모아 전시하는 ‘마음으로 담은 우리 동네 사진전’을 오는 23일까지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학운동 지사협은 학운동 전체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33%가 독거 어르신 가구인 점을 고려해 지난 5월부터 어르신들이 마을공동체 속에서 이웃과 어울리면서 자존감과 성취감을 높일 수 있는 맞춤형 문화예술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번 전시는 학운동 문화예술 프로그램인 ‘내 손으로 내 인생 드라마’ 회원 9명이 매일 한 컷씩 일상을 기록한 사진을 지역민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했다. 전시실 대관은 국윤미술관이, 액자 제작은 정은강 무등육아원장이 각각 후원했다.

사진전에 참여한 김모 어르신은 “지인들과 함께 마을 곳곳의 사진을 찍으면서 삶의 즐거움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추억을 쌓았다”며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이 담긴 이번 전시회에 많은 분들이 방문해 힐링하고 가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서주섭 학운동장은 “70대 이상 어르신들에게



19일 광주 동구 학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최로 국윤미술관에서 열린 ‘마음으로 담은 우리 동네 사진전’ 개막식에 참석한 시민들이 전시 사진을 둘러보고 있다. 이날 전시된 사진들은 동네 어르신들이 개인 핸드폰을 이용해 촬영했다. /김태규 기자

스마트폰을 활용해 일상의 소소한 즐거움을 드러기 위해 시작한 사업이 전시회까지 개최하게

됐다”며 “이번 전시가 지역민들에게 좋은 추억이 되길 바라고 앞으로도 따뜻한 마을 복지공동

체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혜린 기자

도교육청 생활임금 8.2% 인상 시급 9,500 → 1만280원 책정

전남도교육청이 직원들의 교육·문화 생활 보장을 위해 지원하는 2023년도 생활임금을 1만280원으로 결정했다.

전남도교육청은 생활임금을 지난해 9,500원 대비 8.2% 인상을 시급 1만280원으로 책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과는 다르게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책정한 임금으로 지난 2020년 5월 생활임금조례 제정을 통해 도입됐다.

도교육청의 2023년도 생활임금은 소비자물가 상승률, 임금 인상률, 최저임금 인상률, 재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으며 노동자 980여명이 생활임금의 혜택을 받게 된다.

/최환준 기자

전남도 공무원 승진 채 발전 평소 가족에 업무 부담 호소

업무 부담을 호소해온 공무원이 승진 채 발전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9일 오후 4시께 목포시 도심 한 주차장에서 40대 남성 A씨가 승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전남도에서 근무하는 현직 공무원이다.

그는 전날 오후부터 귀가하지 않았다. 경찰은 가족의 신고를 받고 A씨 소재를 파악하고 있었다.

A씨는 평소 가족에게 업무로 인한 부담감과 압박감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사망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목포=박승경 기자

“시 여성인권보호관 정치인 임용 의문”

여성단체 “업무 독립성 훼손”

광주전남여성단체가 시 여성인권보호관에 전직 기초의원 임용과 관련 “여성 인권 강화 정책을 포기하고 업무 독립성을 훼손하는 일

이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은 19일 성명을 내고 “시 여성인권보호관은 인권 침해 관련 식견·경험을 갖춰 성인지 감수성을 바탕으로 젠더 폭력을 진단할 수 있는 전문가여야 한다”며

“시가 업무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이해하고 있는지 심히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직무와 무관한 정치인을 시 여성인권보호관에 채용한 것은 여성 인권 강화 정책을 포기하고, 업무 독립성을 훼손하는 일이다”며 “성평등 광주를 실현시키겠다는 광주시는 여성인권 증진과 보호 추진에 진정성이 있는지 의문이다”고 꼬집었다.

시 여성인권보호관은 시 산하 공공기관·공기업·자치구에서 발생한 직장 내 성폭력 사건을 상담·조사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한다. 시장의 보고 또는 지시를 받지 않는 독립적 조사기관 ‘인권옴부즈맨’에 배치된다.

시는 지난 7일 여성인권보호관에 광주남구의회 전직 의원 A씨를 임용키로 결정했다. /김혜린 기자

경매 교육 [기초반] [특수반(10명)]

* 특수 전문반 모집 (10명)

- 1) 기초반 (기초부터 실전)
- 2) 중급반 (실전부터 ~)
- 3) 특수반 (유치권, 법지, 지분)
- 4) 투자반 (투자가능한)

▶ 경매 물건 추천 ◀

광주	남구 지석동 (토지) ▶ 감정가 2억1,300 → 최저가 1억5천
	광산구 수완동 (윤슬의아침) ▶ 감정가 6억3,300 → 최저가 4억4천
	북구 삼각동 (어린이집) ▶ 감정가 7억1,100 → 최저가 3억9천
	광산구 쌍암동 (근린상가) ▶ 감정가 5억1,800 → 최저가 2억9천
	광산구 하남동 (공장) ▶ 감정가 36억4,500 → 최저가20억4천
	서구 농성동 (토지) ▶ 감정가 6억1천 → 최저가 4억2,800
	서구 풍암동 (토지) ▶ 감정가 25억 → 최저가 14억
	북구 용봉동 (근린상가) ▶ 감정가 32억 → 최저가 11억6천
남구 지석동 (토지) ▶ 감정가 2억1천 → 최저가 1억5천	

담양토지 (매매)

▶ 담양 프로방스 앞

- 임야 : 7,500평
- 용도 : 개발부지, 관광농원, 임산물식재
- 가격 상담

010-2614-9801